



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택 회장

[학력]

1965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사
1987 서울대 대학원 전력계통 석사
1995 서울대 대학원 공학박사

[주요경력]

1999~1999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2001~2004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2005~2007 한국공학한림원 자문단 대표
現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한신에너지(주) 회장
한라풍력(주) 대표이사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세가 세계 선진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분명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관심도 높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복잡하게 엉켜 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만큼 어려워 보인다. 국내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택 회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살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풍력산업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택 회장의 답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풍력산업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 플랜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계 모두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현실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이 회장은 지금 풍력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누구 하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모두의 정책들이 조금씩 부족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현재 국내 풍력산업부터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풍력산업은 해외 풍력 선진국들에 비해 후발 주자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561MW의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대비 0.18%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풍력설비 시설용량이 91GW로 세계 1위인 중국과 비교해도 0.6%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이것이 우리 풍력산업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0.2%에 그치고 있어 규모 및 비중 측면에서 아직은 산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분석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점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2005년 이전에는 외산 풍력발전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정부와 발전사업자들의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설치 사업, 시스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져 국산화 비율이 2013년 연말 기준 총 설비용량의 약 40%에 달하는 등 점차 설치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품 기업들 또한 국산발전기의 국산화율 상승을 위해 적합한 부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요 부품인 Tower, Shaft, 단조 및 주물 제품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시스템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회장은 현재 풍력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Power Interview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으로 영향권에 있을 때부터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동시에 국민들 역시 이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풍력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시대에 기존의 화석연료에 바탕을 두고 성장한 재벌 그룹을 위시해 변화를 외면했고, 국민들 역시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녹색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서 변화를 유도했으나, 당시 정책 역시 ‘말’과 ‘보고서’로만 동조했을 뿐 실천에 옮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근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육상풍력의 규제를 풀어 주도록 수차례 강조를 한 것에 겨우 힘을 받아 저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시 민원 문제는 전환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풍력은 주민 참여 혹은 주도형 풍력발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력산업협회는 국내 풍력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을 주관하는 등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육상풍력의 경우 많은 개발업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모델을 개발하면 저변 확대가 될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해상풍력에 있다는 것.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단지 선정에 있어 경제성이 부족하고 민원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을 지정,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제조회사도 유행처럼 너도나도 참여하다가 기대보다 사업성을 얻기 힘들어 일부 회사는 사업을 접었고, 일부는 사업 확장 시기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바람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해 추진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이 회장은 언급했다. 지금이라도 풍황이 좋고 민원 문제가 적은 지점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데 대해 이 회장은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사업 초기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면서 기대를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자, 사업을 접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 결국 전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며 포기를 한 것이죠.”

이에 이 회장은 대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인 포석으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대기업의 간부들이 너무 자만심에 쌓여서 자기 방식 대로 추진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풍력 사업본부의 수장은 발로 뛰면서 세계 시장의 흐름을 직접 접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변화를 부하들의 보고서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접촉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정리는 잘 돼 있지만 살아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일례로 타워공급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선 국내 C사의 경우 CEO가 세계 시장을 직접 누비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일종의 분사 개념인 Spin-Off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사업을 독립적인 주체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나는 분야와 풍력 분야를 함께 놓고 평가했을 때 당연히 풍력 분야는 관심을 덜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조직(회사)으로 분할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책임과 함께 권한도 부여해야 소신껏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력 분야는 소위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또 다른 대안으로 인수, 투자 등 협력관계 구축을 들었다.

“미국의 GE사는 엔론사의 풍력설비 제조 회사를 인수해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공사례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Siemens사도 덴마크의 보나스라는 회사를 인수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S사가 덴마크의 Vestas사에 투자하여 해상풍력을 추진했더라면 자금 투자를 훨씬 적게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 않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풍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해상풍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과 상호교차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의 전문 분야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점을 합해 상호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업체가 네덜란드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사업에 같은 비중으로 네덜란드 업체를 참여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양국 간의 풍력협회가 올 5월 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에는 관심 있는 업계 대표들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현지 기술 수준과 실적 사항을 조사했고, 최근 네덜란드 국왕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네덜란드 해상풍력 상호 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Power Interview



풍력산업협회는 지난달 3일 네덜란드와 해상풍력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양국이 약 700MW 규모의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양국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행히 네덜란드에는 시스템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유럽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민원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대해서도 이 회장은 정부와 국민에 협조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경제성 확보입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는 우선 사업성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전력계통의 한계가격(SMP)이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SMP 가격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해 차액보증제도(CfD)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풍력산업의 경우 원자력산업에 못지않을 만큼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해 활성화 방안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계통연계점을 적정한 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은 원래 불안정한 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풍력발전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출력상황으로 인해 전력계통에 불안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운전을 하지 않는 양수발전 등을 활용하면 풍력발전 역시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자립의 한 수단인 풍력산업의 경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해 풍력발전의 확장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풍력 산업계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업계의 경우 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업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 풍력발전 설비의 중요 부품인 Tower를 제조하는 C사는 세계적인 챔피언이 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풍력을 전달하는 Shaft 제조회사인 D사도 세계적인 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장점을 본 받아 적자생존의 엄연한 현실을 인지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풍력산업의 인력양성과 관련해 이 회장은 실무 분야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풍력설비의 O&M은 높은 곳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에 대한 교육과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풍력터빈에 올라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설비의 O&M은 해상에서 작업하기에 더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풍력산업협회에서는 교육기관과 함께 이 교육 설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데 있어 풍력산업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풍력시장의 경우 2030년까지 연 60GW 이상의 안정적인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력산업 협회는 앞으로 국내 풍력시장의 활성화를 협회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 시장의 변화에 따른 동향 파악,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해외진출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과 정책이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자 정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회장은 해상풍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RPS 제도의 문제점 개선, 송전연계 제한규정 개선, REC의 차등 적용 확대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